

국힘 쇼핑몰 앞세운 서진전략 ‘호남민심 갈라치기’

“민주당의 일그러진 현실 조명... 최근 지지율 반영 20%대 기록”
윤석열·이준석 방문 지지 호소... 진정성 갖춘 공약 시리즈 준비
민주 과잉대응 자제 “대선용 사랑발림 공약... 막판 지지층 결집”

20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국민의힘 ‘서진(西進) 전략’이 과연 ‘윤석열 돌풍’으로 나타날 것인지 ‘찾단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서진 전략’의 진정성이 통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광주 복합쇼핑몰, 전남 흑산관광 등의 공약이 기득권에 안주했던 민주당의 일그러진 현실을 조명하면서 호남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대부분 20%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팩트’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의 ‘윤석열 돌풍’이 대선 막판 현실화된다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체적인 판세를 흔들면서 정권교체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대선 막판, 뻘뻘한 일침 속에서도 이를 연속 광주와 전남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민심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공약이 호응이 크다고 보고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과 같은 성격의 공약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멀고 모호한 공약보다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할 수 있는 공약으로 ‘진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단이 흑산관광 건설이라면 후속 공약으로는 KTX와 SRT 호남 유치, 목포 남약 신도시 고등학교, 나주 에너지엑스포 유치, 광주 지하철 2호선 조기 완공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선 막판, 호남 민심을 겨냥한 대형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호남 민심의 저변에 민주당 피로도가 예상외로 크고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라는 동질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진정성만 갖춘다면 윤 후보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 국민의당 및 민주평화당 등 호남의 민주당 기득권 그룹에 합류하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각 지역마다 실제적 지지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주

장을 내놓고도 있다.

윤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호남에서 윤 후보가 30%의 지지율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호남 민심의 저변을 보면 20%대 내외는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가짜 서진정책’이 호남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남 민심이 대선용 ‘사랑발림’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대선이 막판으로 갈수록 TV 토론 등을 통해 점차 윤석열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호남 민심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20%대를 넘는 결과에 대해서는 ‘착시 현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역대급 비호감 구도 등 정치적 피로감에 의한 일시·충동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감각이 남다른 호남 민심의 집단지성을 간파하고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복합쇼핑몰이나 흑산관광 등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타겟팅 공약’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랑발림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모두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라는 것이다. 과잉 대응도 자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호남 민심의 저변에 이재명 바람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석 의원(북 울)은 “이제 광주-전남 민심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로 결집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날이 갈수록 호남 민심의 결집도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호남 민심과 20·30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세심한 공약 제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윤 후보가 15% 이상은 어렵겠지만 역대 보수정당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당진 유세 청년 지지자들과 주먹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충남 당진 어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청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슷 비슷한 대선후보 공약, 선심성에 실현 가능성도 미흡

한국정책학회·행정학회

4개 주요 정당 정책공약 평가

규제혁신·보육정책 등 유사

사교육·복합·최저임금 상이

대선 후보들이 재경 고려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책 수요 발굴이 체계화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 내용은 과거와 비교해 점점 유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4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두 학회는 이번 대선 정책 공약의 주요 특징에 대해 “과거에 비해 후보자들 간의 공약들이 서로 유사해지고 있다”면서도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학회에 따르면 4당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가운데 유사한 주제로는 ▲규제 혁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보육정책 ▲연금개혁 ▲양극화·소득 격차 완화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관련해선 4당 후보가

기본 방향에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사회에서 미·일·중·러와의 전략적 우호관계의 스탠스 유지, 특히 대일관계에 있어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 4당의 후보가 동일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해서도 4당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냈다. 4명의 후보들은 관련 부처 기능 일원화, 촘촘한 돌봄체계의 구축 및 책임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3당 후보들이(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모두 연금 관련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과정,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소득격차 이슈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서비스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했다.

대학입시 및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3당 후보(이재명, 윤석열, 심상정)들이 수시와 정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혀 유사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수시 전면 폐지 및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명의 후보자들은 ▲국립공공의학대학(원) ▲부동산 세제 ▲최저임금제 ▲청년일자리 ▲복합 대응 관련 공약에선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국립공공의학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교수확보의 어려움과 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다. 안철수 후보는 필수로 불

균형 해소와 전공의 과목별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한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설립에 찬성하며 국립대마다 공동의대 설립 및 부속병원 설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영역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1주택자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완화를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함께 거래세 하향, 보유세 상향 방침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불로소득 환수 등을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4당 후보들의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을, 윤석열 후보는 청년도약준비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제 관련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고임금법을 도입하여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의 임금격차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 목표치를 정하지 않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강화를, 안철수 후보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했다.

복합 대응 및 억제력 강화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복합 대응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된 전략으로 강조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한·미간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역량 대폭 강화

전국광역자치단체장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 지사)는 23일 영상회의를 통해 제49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 개편이 단행됐다.

지난 1월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란 역사적 의미는 부각됐지만 안전 선정·

심의 및 회의 진행 등에서 중앙 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협의회 내에서는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보다 강력한 결속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대응 및 추진’을 협의회 핵심 사업으로 명기했다.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통한 기능과 역량을 총 결집하는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순천시 세계유산 알리기 캠페인

Korean Heritage Route Suncheon

순천의 락월한 가치를 만나는 여행 유네스코 세계유산, 순천만갯벌